

이명박 대통령 오늘 밤 10시 '대통령과의 대화'

경제난 해명·미래 비전 제시 주력할 듯

9일 저녁 TV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에서는 최근 정국을 관통하고 있는 '핫 이슈'가 총망라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밤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되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6개월의 소회와 함께 향후 국정 운영방향을 밝힌다.

또 이 대통령은 ▲경제 ▲사회 ▲정치 ▲미래비전 등 분야별 현장 패널리스트의 질문에 답변한다.

이어 네티즌들로부터 접수한 질문과 전국 각지의 시민 10여명으로부터 받은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영상 질문도 이어진다.

우선 약 1분 분량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국민에게 인사를 한 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별 질문에서 이 대통령은 집권 초 국정지지를 추락을 비롯해 쇠고기 파문, 촛불집회, 사교육비 부담, 독도영유권 문제, 이산가족 상봉, 9월 경제위기설, 부동산 대책, 세계개편안 등 20여개 핫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세계 개편안 등 '20여개 핫 이슈' 질문 답변

전국 각지 영상 질문도...2차례 실전 리허설 등 준비 만전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마무리 발언에서는 세부 주 초기 국정난맥상을 극복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동시에 최근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부 초기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대통령과의 대화에는 전문가 패널 3명(유창선 시사평론가, 엄길청 경제평론가, 이숙이 시사 IN 뉴스팀장), 섭외패널 5명(실향민 1세대 남궁선, 성지현 이화여대 학생, 이은혜 경제대 학생, 고봉환 한국토지공사 노조위원장, 박기태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마무리 발언에서는 세부 주 초기 국정난맥상을 극복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동시에 최근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정부 초기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대통령과의 대화에는 전문가 패널 3명(유창선 시사평론가, 엄길청 경제평론가, 이숙이 시사 IN 뉴스팀장), 섭외패널 5명(실향민 1세대 남궁선, 성지현 이화여대 학생, 이은혜 경제대 학생, 고봉환 한국토지공사 노조위원장, 박기태

현장과 시각

조선소의 현실



홍행기

정치부 차장

"전남지역 조선산업이 위기에 처한 데는 타지역 선발 조선업체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지난 1일 도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전남 조선산업의 위기가 일부 기존 대형 조선업체들의 악의적인 소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하는 듯 했다.

박 지사는 "기존 대형업체들이 금융권에 로비를 해가며 전남지역 신생 조선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막고 있다고 들었다"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다는 특정 조선업체의 이름까지 거론했다.

박 지사는 특히 참여정부와는 달리 새 정부 들어 금융권에서 지역 조선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일부에서는 정부차원의 특혜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 지사의 얘기처럼 지역 조선업체에는 '선발 대형 조선업체들이 후발 신생 조선업체를 죽이기 위해 금융권과 정치권 로비를 통해 돈줄을 죄려한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 소문에는 '신생 조선소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기존 대형 조선소들의 일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그럴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여져 있다.

전남지역 조선업체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다수 조선업체들이 1차당 수백~수천억 원에 이르는 선박 수급 적을 수주해놓고서도 금융권의 지원을 받지 못해 일손을 놓고 있는 상태. 늘어난 수주 물량에 맞춰 도크 등 시설을 확충하려는 조선소들도 금융권이 돈줄을 죄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금융권의 무책임한 태도다. 전남 조선산업의 어려움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관련 업체와 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는다.

몇몇 금융기관이 기자에게 연락해와 '지역 조선업체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금융계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물어 왔지만, 후속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정부가 마찬가지다. 전남도와 목포상공회의소 등 각계에서 청와대와 정부부처에 지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권이 기존 조선업체들의 로비에 흔들리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조선산업은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하지만, 지역 조선업체들이 외국에서 수주한 선박을 지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 위약금을 물고 또 최악의 경우 계약이 깨진다며 조선업에 의지해 온 전남 서남권의 경제도 한 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전남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 '佛心 달래기' 직접 나선다

국무회의·대통령과 대화서 '강한 유감' 표명키로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에 대한 불교계의 반발을 진정시키기 위해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성난 불심이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악화될 기미를 보이자 이 대통령이 '소방수'를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9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할 자리에서 불교계의 마음을 다독이는 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이어 당일 저녁 TV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개사과에 거부감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진 이 대통령이 사실상 유감을 뜻을 밝히기로 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머리를 숙이는 모험을 보이지 않고서는 이번 불교계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5일 "공직자들은 종교문제와 관련해 국민화합을 해치는 언동이나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된다. 관련 부처에서 법과 제도적인 개선책을 강구해달라"며 종교편향논란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청와대 수석들에게 지시했으나 불교계의 진정된 사과가 없다며 계속 반발해 왔다.

여권 내에선 불교계와의 갈등이 깊어질

경우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다시 급락하면서 '제2의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돼 온 게 사실이다.

한나라당과 국회 원로들의 잇단 청와대 압박도 이 대통령의 결단을 앞당기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조처로 불교계의 반발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종교편향의 대표적 인물로 지목된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 없이 불교계가 과연 이번 조처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불교계의 반발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불교계 내부에서도 강경파가 있기 때문에 향후 사태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홍준표(왼쪽) 원내대표가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김재운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국현·김재운 체포동의안 상정 무산

미감 시한 넘겨...법적 공방 여전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8일 국회법에 규정된 시한을 넘기도록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법은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일 제출한 이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5일 오후 2시6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72시간이 지난 8일 오후 2시6분에 국회법상 처리 시한이다. 국회 사무처는 체포동의안의 72시간 내

처리가 무산됐더라도 체포동의안 자체가 완전 폐기된 것이 아니라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탄핵안이나 장관해임건의안의 경우 72시간 내 처리토록 하고, 그 이전에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안전을 폐기한다고 법에 명문화했지만, 체포동의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계류중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2월 9일까지 여야 합의로 상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정현 의원 "정의화 의원을 호남 소통 창구로"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여권 내 호남 창구 개통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모았다. 이 의원은 8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와 여당 내에 호남 실재 창구가 필요하다"면서 "소통을 위한 핫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호남 출신인 그는 "여권에 호남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호남 정서를 신속하고 영향력 있게 전달할 사람은 딱히 없다"면서 "앞에서 기다리지 말고 소통의 창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그는 "창구로 정의화 의원을 추천하고 싶다"면서 친이계 중심으로 분류되는 부산 출

신의 정 의원(4선)을 소통의 '창구'로 추천했다.

그는 "2004년부터 지역화합발전특위 위원장을 맡아 그 분만큼 자주 진정성을 갖고 호남 현장을 누빈 분을 못 봤다"면서 "4년 내내 호남지역 예산 챙기기로 여러 기초단체와 광역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거나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Tour.com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Hong Kong, Beijing, and Hwangshan.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LotteTour.com and details for various tours and events.